

한청(약칭) 이적성 검토의견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관련 문건분석-

2002. 3.

한청은 강릉에서 열린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한청과 북측의 청년단체협의회(6.15. 2002.)는 「한국미 학자회」(조국미학자회)의 제2차 회의(6.15. 2002.)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분석자: 유동열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I. 「한청」 강령·규약의 이적정

(1) 연방제 통일강령을 표방

■ 한청은 동 단체의 활동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강령에서 '연방제 통일강령'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인 국가연합제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통일안을 수용동조하여 정당화하고 지지선전하는 것임.

"우리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여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한청 제1기, 제2기 강령 6항, 2002.2.23)

- 한청은 강령에서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원칙)과 〈6.15 공동선언〉의 지지 이행의 연장선에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남북이 6.15 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한 것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의 절충이지 일방적으로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 아님을 청탁하고 있음(다음 장 사례 참고)

- 북한은 우리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6.15 공동선언 2항' (연합제와 연방제)이 결별제통일을 넘어서 합의한 것이라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한청 강령은 북한측 주장을 수용동조하고 있음

■ 북한주청 규약 제2조(목적)에서 이른바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을 조직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한청의 자주민주통일노선은 (사례1) 2000년 8월 15일 '북남 공동선언' 지지환영 및 실천을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단체 연합대회' 시 결의문 2항

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55년간의 통일운동 과정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연방제 통일로 나가는 역사적인 이정표로 된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에서 통일논의를 활발히 벌여 온 민족의 의사를 모아 나감으로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사례2) 2002년 2월 5일자 평양방송 논설 ‘민족자주통일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며.... 중략... 연방제통일방안이야 말로 민족의 의사와 이익,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고 쉽게 실현할수 있게하는 최선의 통일의 방도로 되는 것이다... 중략... 6.15 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연방제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 한청은 강령뿐만 아니라 한청 창립대회 자료집, 1-2기 정기대의원 총회 자료집 등에서 연방제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더 나아가 한청 의장인 전상봉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실천과제’이라는 기고문과 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6.15 공동선언이 연방제통일을 원한 것이라며 주장함을 유통하면 일관되게 통한의 연방제통일을 정당화하고 있음(단을 잘 살펴보면 참고용 선동하고 있음. 이는 현 정부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대남선동에도 백탁을 갚아하는 주장임)

(2) 자주 민주 통일 노선

■ 김대중정권은 국정운영에서 민족통일을 차지하고 민족의 생존을 계획한 청은 국정노선(목적)의 전통 위통비,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을 조직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한청의 자주 민주 통일노선은 동 단체 발행문건의 성향으로 보아 북한의 대남투쟁과제인 자주민주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것임.

제2조(목적)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한청 규약 제2조)

- 자주 민주 통일이란 북한이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설정한 대남 투쟁 3대 과제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민전」의 투쟁강령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이 자주리 바마자주화투쟁을 민주라 반파쇼민주화투쟁을 통일이란 연방제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하는 것임.
- 한청이 주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노선이 북한의 대남투쟁을 수용한 것이라는 근거는 다음장의 예시에서 보듯이 북한의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민권민주투쟁으로 표현), 연방제통일투쟁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수용동조하고 있다는 것임.

II. 주요 조직문건의 이적성

(1) 혁명권을 반민중정권으로 규정

■ 혁명을 현대민중정권을 반민족 반민중 정권으로 폐도하며, 정권을 폐면하고 반민족투쟁을 선동하고 있음은 의논이 현정부를 통해 전해지는 시대흐름 국면의 대남전통과도 나역함을 깊이하는 주장입니다. (2002. 1. 18.)

"김대중정권은 국가주권을 험값에 팔아 놓았고 민중의 핵심국주의 손에 넘겨주는 반민족적 반민중적 행보를 다그쳤고 있다가 이로 인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은 끝을 모르고 죽임을 당하면서 농업있으며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게 일방적 회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민주민권은 급격히 약화되고 한국사회의 적민지성은 심화되고 있다... 중략...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경제정책은 극소수 가진자들을 제

상이 되고 있다” (한청 창립대의원총회 창립대회자료집, 4면, 2001.2)

“ 대중투쟁사업.... 김대중정권의 외세공조반대투쟁...” (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 자료집, 59면, 2002)

“ 민생파탄, 사대미국정권 김대중정권 반대한다” (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 자료집, 2002.2, 79면)

(2) 자주 민주 통일노선 채택

■ 한청은 출범선언문 등에서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와 목표인 (자주-반미자주화투쟁, 민주-반파쇼민주화투쟁, 통일-연방제 조국통일투쟁)을 동 단체가 전개하는 변혁운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 원칙 아래 투쟁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한청이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용~~동조~~하여 수행하는 단체임을 자인하는 것임.

지난해 역사적인 평양선언과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민족은 이전에 불сты의 역사에 종지부를 짚고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진원기로 맞고 있다. 중국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기틀을 확립하고 그 성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기회와 책임을 갖게 되었고 한당 통합의 주역이 된 것이다. (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 출판부, 18면, 2002)

“ 우리들의 죄책인 한청은 자주 민주 통일원정군적 죄책에 걸 초하고 있으며 이를 완수하는데 그 정치적, 조직적 지향과 목적이 있다. 사실을 새삼스레 강조합니다. 자주민주통일은 오늘을 살는 우리민족에게 가장 숭고한 원칙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청을부터 끝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한청 창립대의원총회자료집, 4면, 2001면)

(3) 연방제 통일 실현 선동

■ 한청은 강령뿐만 아니라 각종 문건에서 일관되게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6.15공동선언이 연방제로 나가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하고 있음. 이는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인 구기연합체안을 부정하고 북한이 통일방안인 연방제통일론을 수용놓조하여 이의 수행을 선동하는 것임.

"전국연합과 범민련을 중심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한청 창립선언문 中, 2001.2.10)

"분명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보검이다...중략... 휘날리는 우리의 깃발 당당하고 자랑차게 움켜쥐고 연방통일조국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을 한국청년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한국청년조국통일 결의대회 결의문, 2001.8.15)

"지난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민족은 마침내 본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중략... 이제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깃발을 띠어들고 조국통일의 전통에서 일행발전의 바탕을 마련하여 홀라불 앞북통발의 역사에 천棺하려는 그동안의 노력을 정식화하고 연방통일의 주역이 앞설듯이 봄부(한청 6.15공동선언선언문, 2001.2.10) 2기 청기대의 원총의 출범식 자료집, 2001.2.10)

"...이의 같은 이유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정치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나침반은 분단고착의 연합체안과 통일지향의 연방제안과 화해할 수 없는 간극속에서 연방제 통일이라는 정방향을 가르키고 있는 것이다"(전상봉 한청의장,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실천과제, 인천통일연대 홈페이지)

(4) 북한의 대남노선을 투쟁사업으로 설정

■ 한청은 창립선언문, 제1기 사업방향, 제2기 사업방향 등에서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인 “주한미군 철수, 무시방한 저지투쟁,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반대, 미군의 학살만행 진상규명, MD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범민련-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주적론 철회” 등을 설정하고, 이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음. 이는 한청이 북한노선에 동조하여 이를 정당화하고 고무 선동하는 단체임을 보여주는 것임.

“ 2002년 사업계획 대중투쟁사업 □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투쟁 . 핵심적으로 1) 2) 아리랑축전 참가투쟁... 3) 미국의 간섭과 긴장 고조, 분열책동 저지투쟁,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에 대한 단죄 규탄투쟁을 통해 내외의 반통일세력을 분쇄해 간다”* 이밖에 1) 김대중 정권의 외세공조반대투쟁 2) 주적론 철회투쟁 3)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한다 □ 반미자주화투쟁 * 핵심적으로 1) 합동군사훈련 저지투쟁, 무기수입반대투쟁을 전개하며 반전평화 반미투쟁, 대북 적대정책 반대투쟁의 수위를 높인다... □ 반우민권투쟁 * 핵심적으로 1) 반통일, 반핵, 반민주, 반민중 학살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2) 한총련 10주년 기념사업회 개최를 전개한다. 이밖에 양심수석방투쟁... “한국정부는 2002년 6월 15일 공동선언을 철회하겠다”(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2002년 59회)마다 있어 국가보안법을 민족대통일의 사회정의적 문제로 맞주어 위헌불법을 전술화시킨다. 한총련과 한청의 2002년 투쟁사업계획은 “위와 같이 양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설정하고 있음.”

O 자주노선: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자주화투쟁 선동

“ 우리는 각계각층의 모든 투쟁이 자주의 방향으로 미국반대투쟁으

로 나아가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배경으로서 '남북 개정투쟁,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하며 제국주의의 경제침탈을 막아내는 투쟁을 광범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한청 창립대의원총회 창립대회 자료집, 34면, 2001)

“우리는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한반도의 대전을 조장하는 미국의 모든 내선성색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군기지의 반환과 주한미군을 철수 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한청, ‘대북강경정책을 내세우고 MD정책을 지지강요하는 미국무장관 콜린파월의 방한을 반대한다’, 2001.7.27)

“악의 축 미국대통령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한청, 부시방한반대 투쟁 교양참고자료집, 2002)

O 민주노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이 흔들리면 분열밖에 없다는 지난 날의 교훈에 기초하여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땅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설 나갈 것이다.”(한청 창립선언문, 2001.2.10)
에서 “당신들은 그래서 계약을 3대호소와 3대 제안” 그대로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자문위원회에 있는 국가보안법을 민족대단결의 사회정치적 원칙에 맞추어 민주적 원칙으로 현실화시킨다. 한종련과 법민련의 이적규정을 철폐하는 것과 더불어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해 해제 과제를 결합하여 자유로운 정치사상의 활동보장을 기본적인 인권을 되찾는다.”(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 자료집, 26면, 2002.2)면)

(5) 북한체제 옹호 미화

■ 한청은 '강성대국 건설-선군정치노선'과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고수' 등 북한 김정일정권의 통치노선과 시책을 옹호미화하고 있음. 이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정당화하고 고무찬양하는 것임.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결속짓고 선군정치의 전략화와 강성대국의 건설을 향하고 있는 이북의 자주역량이 건재하고 있다...중략...북의 반제자주 사회주의역량 - 자본주의대 사회주의의 대결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권의 동반 몰락이후,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를 완성시켜나가는 국가단위이며, 전세계적인 반제투쟁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반제기치를 선명히 하며 미국과 각축을 전개하는 유일한 단위이다 - 특히 선군정치노선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완강히 전개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결속지었다" (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 자료집, 2002.2, 55-56면)

(6) 기타 고현(高懇)의 주장

■ 2002년 5월 22일자 공화국 정부·중앙·단체 협동회의 회장으로서 평양에서 개최된 제3대 국방위원회 3차 회의에서 "3대 국방기조로 3대 국방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는 무장, 국가보안법, 경제 개발, 민족통일(민족통일로 으로 표현), 연합군 해체, 국제적 복무의 확장, 경제·정당·사회민족·군부 협력, 국·한영화폐 후퇴(後退) 즉기회(即機會) 창출(創造) 등이다" (한청 2기 정기대의원총회 출범식 자료집, 2002.2, 63면)

- 3대 제의란 6·15공동선언 이행, 조국통일 확성화, 통일장애요인(반전 투쟁, 외국군대 철수, 주적론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등), 3대 호소란

을 해를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6.15~~~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 5월-8월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
기간으로 설정할 것을 말함.(북한 중앙방송, 2002. 1.23자 방송)

■ 조총련 산하 한청(재일한국청년동맹)과의 연대투쟁

■ 북한 청년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의 교신, 연대투쟁

III. 종합 평가

1. 이상의 한청(약칭)의 강령·규약 및 주요 조직문건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첫째, **한청은**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용하여 **한국사회를 미제시대**
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현정권을 반민중 사대체국정권 등으로
로 폐도하고 (체제부정성)

둘째, **한국사회를 혼연화하기** 위해 **동 조직의 정체화**로 **북한의 대남통일 노선을 계획하고**, 이의 연장 **선에 대남전선을 확장하는** 등 **민족통일전선(민족통일전선), 민족통일전선 등**
민족통일전선(민족통일전선), 민족통일전선 등 조직을 **구성하고**, 이의 **통일방법**은 **민족통일전선(민족통일전선)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친북옹공성과 폭력통쟁성)**

셋째, **지향목표로 자주 민주 통일이 실현된 사회(즉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사회주의 지향성)**

2. 이러한 주장은 결국 **한청**이 단순히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을 지지선전하는 차원을 뺏어나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행하는 단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바, **한청**은 민족해방(NL)계열(PDR파)의 친북좌익 청년운동단체라고 판단됨.
3. 따라서 **한청**은 민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을 고무찬양, 동조선전하는 이적성을 표출하고 있는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3항, 5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2002. 3. 11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유동열

주민등록번호 : 700420 - 1048018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약칭 **한청**) 조국통일위원회

한청 통합위원회

주소 : 서울 은평구 신사2동 344-16호

서울 종로구 창신동 14번지